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겨레·경향·서울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이원섭*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 IV. 내용분석 결과
- V. 결론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이른바 '조·중·동')와 한겨레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이른바 '한·경·서') 사설 내용을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가 가장 보수적이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으로 보수적이었으며, 한겨레신문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경향신문, 서울신문 순으로 다소 진보적 색채를 띠었다. '조·중·동' 묶음은 이데올로기적 결속도가 높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보수적 논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데 비해, '한·경·서' 묶음은 이데올로기적 친밀도가 느슨하며, 평소 비슷한 목소리를 내다가도 정치적·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된 논조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볼 때, 한겨레신문이 진보적이라면 경향신문이나 서울신문은 오히려 중립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보수 쪽에 치우친 '조·중·동' 묶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 쪽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한겨레신문과 한데 묶어서 진보적 언론 '한·경·서'로 일컬으며 보수적 언론 '조·중·동' 묶음과 일률적으로 대칭시키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조·중·동'·'한·경·서' 분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론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의 인식과 보도 태도는 해당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낸다. 각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남북문제 보도 태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터이다.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남북문제 외에도 그 언론이 지향하는 세계관이나 노사문제에 대한 시각 등 여러 측면을 총체적으로 종합 분석할 때 한층 명확히 드러날 터이다. 다만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각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 남북문제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 사이에, 또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에, 남북문제를 보도한 언론의 성향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적실성을 지닌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내릴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 역시 국가나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특성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강력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강원택, 2004).¹⁾

1) 강원택(2004)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이념)의 특성을 좌우의 균열, 권위 대 자유주의의 균열, 근대 대 탈근대적 가치의 갈등, 반공 이데올로기의 수용 대 거부 등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면서, 그중에서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평화번영정책’은, 노 대통령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남북화해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민족화해 흐름을 불러일으킨 김대중 정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²⁾ 더 큰 이유는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부가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조지 부시 공화당 정부로 넘어간 데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이른바 네오콘 그룹의 주도로 대북 강경책이 공세적으로 펼쳐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북핵 문제에 시달리며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공간을 좁혀 확보하지 못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척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적 언론의 혹독한 비판에 줄곧 시달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 언론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언론의 대정부 비판을 더욱 거칠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과 이들과 이념적 궤를 같이 한 보수적 언론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속 유지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을 ‘좌파’ 내지 ‘친북’으로 몰아붙이며 압박을 가했다.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이에 반발해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맞선 북한의 강경 노선은 가운데 낀 노무현 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혔고, 보수 언론의 정부 비판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 언론이 정부의

2)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이견과 갈등을 대북정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한 듯하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정부 출범 초기 대북송금 의혹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일 때, 야당의 협조와 정국 안정을 겨냥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는 데서 상정적으로 드러났다.

대북포용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보수적 신문과 대북포용정책을 옹호 내지 지지하는 진보적 신문으로 양분돼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으로 귀결됐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한 보수 논조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한데 묶어 이른바 ‘조·중·동’으로 일컫는 것에 빗대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과 대체로 비슷한 논조를 펼친 경향신문·서울신문을 한데 묶어 이른바 ‘한·경·서’로 일컬으며 ‘조·중·동’에 대칭시키는 분류도 나왔다. ‘한·경·서’ 묶음을 ‘조·중·동’ 묶음에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사용하는 경향은 비단 신문 방송 등 언론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도 널리 퍼져 폭넓게 운위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며 언론의 이런 편 가름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 언론을 보수 언론 묶음인 ‘조·중·동’과 진보 언론 묶음인 ‘한·경·서’로 구분하는 이러한 분류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증을 거친 바가 없다. ‘조·중·동’ 묶음과 ‘한·경·서’ 묶음 분류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칫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언론의 고유기능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II. 선행 연구 검토

마르크스(Marx)는 이데올로기를 ‘현실의 삶에 대한 상’이라고 개념화하면서 그 현실적 삶은 경제적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를 이른바 토대와 상부구조로 나누고 토대를 이루

는 것이 경제 또는 경제적 삶이며, 상부구조는 이들의 반영물인 정치·문화·사회·이데올로기적 현상들로 보았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란 경제적 토대인 현실적 삶의 반영이거나 결정체라고 규정하였다.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즉 사회에서 물질을 지배하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을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Marx & Engels, 1970, 64).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는데, 경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데올로기를 결정하는가를 놓고 그의 관점을 따르는 정치경제학자들과 문화연구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경제학자들은 미디어 내용이 사회의 경제관계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간주하며 경제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의 관계가 상당히 직접적일 것이라고 보는 반면 문화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미디어와 그 메시지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Shoemaker & Reese, 1996, 365). 문화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홀(Hall)은 언론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엘리트의 이데올로기가 전파되는 핵심적 통로로 파악했다. 홀과 동료들(1978)은 취재원과 언론의 관계를 ‘1차 규정자’와 ‘2차 규정자’로 구분하면서 언론은 1차 규정자인 권력자나 고위층, 즉 공인된 취재원들의 시각과 해석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그러나 2차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규정자들이 항상 내적 통일성을 갖춘 단일집단이라고 보기 힘들고, 1차 규정자와 2차 규정자 간의 관계도 일방적이고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용희(2006)는 주류언론의 보도 대부분이 한 사회의 지배엘리트에 대한 것이지만, 언론이 이들의 말과 행동을 항상 두드러지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은 아니며, 개별 언론사의 편집방향에 따라 우호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한동섭·

임종수(2002)의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국내 유력 언론 중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뚜렷이 대비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북한 관련 보도들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는 정보원의 진술 중에서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목소리를 '가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맞게 현실을 정의하고자 하는 헤게모니적 작동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지배엘리트라고 해도 자사의 편집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묘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뉴스 보도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논하는데 할린(Hallin, 1986)의 분석 틀은 매우 유용하다. 할린은 뉴스에서 사회적 가치가 수용되고 배제되는 원리를 '합법적 논쟁의 영역', '합의의 영역', 그리고 '일탈적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은 '합법적 논쟁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할린에 따르면, '합법적 논쟁의 영역'은 정치·사회적 과정의 주요 인물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나, 선거 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의 논쟁들이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사회의 합법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다양한 시각과 가치들이 헤게모니적 갈등을 벌이는 곳이다. '합의의 영역'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의 영역으로, 언론은 합의된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옹호자가 된다. '일탈적 영역'에는 사회의 주류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지배적 가치와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서 언론의 역할은 '일탈'을 노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며 정치·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논의과정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박정순(2000)은 할린의 모델을 이용해 우리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를 분석하면서, 김대중 정부 이전에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호의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 즉 반공이데올로기를 일탈하는 '일탈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뉴스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박정순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이후 북한체제 찬양이나 안보 위협적 뉴스는 '일탈적 영역'에, 평화통일이나 평화공존, 화해협력은 '합의의 영역'에 있으나, 평화통일 방법론이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부문에 대한 뉴스, 국가보안법, 반공 이데올로기는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진입해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³⁾

북한 관련 보도를 둘러싼 우리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정부 들어서이지만, 우리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 태도에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때부터였다는 것이 중론이다(김재홍, 2003 : 남재일, 2006 : 이준웅, 2004.). 노태우 정부 들어 권력구조가 분산되고 냉전체제의 와해라는 국제환경 변화에 힘입어 가시적인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남쪽 언론의 인식에도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등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

3) 이원섭(2006)은 박정순이 할린 모델을 통해 제시한, 우리 언론이 보이는 북한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는 유용한 분석 틀로 주목할 바가 크다고 진단한다. 다만, 변화의 시기가 그가 설명하듯 김대중 정부 들어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이미 제도권 언론으로 진입한 한겨레신문은 통일방법론이나 북한관련 뉴스, 국가보안법, 반공 이데올로기 등을 놓고 합법적 영역에서 정부나 다른 신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바 있고, 남북의 총리가 8차레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고위급회담을 한 끝에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 뉴스 보도를 둘러싸고 합법적 논쟁이 이뤄진 토양이 이미 마련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는 없으며,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 한다"며 "민족 우선론"을 펴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합법적 논쟁이 일어나는 물꼬를 튼 바 있다는 것이다.

아온 언론의 보도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취재과정에서 제외되던 야당, 재야 및 운동권인사들도 동일관련 보도의 합법적인 취재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진보적 이념을 표방한 한겨레신문의 창간은 북한에 대한 보도시각이 다양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윤영철, 2000, 55).

이어 등장한 김영삼 정부에서 언론 자유의 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언론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히 의견을 펴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대해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현상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군사독재가 물러난 권력의 공백을 재빨리 차지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수 쪽에 기운 대북정책을 펴다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을 겨냥해 때로 전향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는데, 그런 기색을 보일 때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영삼 정부는 특히 조선일보의 보수적 논조에 영향을 받아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우리 사회 지배세력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그동안 지배 세력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온 보수적인 주류 언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급속한 남북 화해·협력 흐름은 보수적 언론과의 마찰을 더욱 깊게 했다. 누적된 갈등은 김대중 정부 후반기 언론사 세무조사 강행으로 폭발했고, 이를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한 보수 언론의 거센 반발과 맞대응은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 보수 언론과의 대결 양상은 더욱 노골화하고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악화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보수언론의 대표주자격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권력과 언론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정상적

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타협이나 융통성보다는 비타협적이고 원칙적 입장 고수를 택한 노 대통령의 완강한 태도는 언론과의 양보 없는 맞대결로 나타났고, 그 결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임기 내내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언론의 정면충돌은 '언론 개혁'을 화두로 언론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확산됐고, 언론의 본령에 대한 근원적 논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언론계 세력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폭발력을 지닌 '언론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 간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언론 전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⁴⁾ 이런 격변의 와중에 이른바 '조·중·동'과 이에 맞서는 진보적 성향 언론으로 '한·경·서'가 한데 묶여 자주 거론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적 언론을 대표하는 '조·중·동'에 대립되는 언론으로 '한·경·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인구에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로 봐야 할 것인가. '조·중·동'과 진보적 언론의 대표 격인 한겨레신문의 논조 대립은 한겨레가 창간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한겨레신문과 한 묶음으로 묶여 '한·경·서'로 불리며 진보언론을 상징하는 용어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정부 들어서이며, 특히 언론 간 대립과 갈등이 본격화한 노무현 정부 때 더 널리 퍼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상기(2002)는 한겨레신문,

4)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 내기'는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와의 친밀도 등과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강명구는 "1987년 이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3대 신문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김대중 정권이 언론 개혁을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노무현 정권 초기 더욱 강도 높은 언론정책이 펼쳐진 데 대해 3대 신문이 폭력적 형태로 대항했고, 다른 매체들이 대립과 갈등에 뛰어들면서 합리적 토론의 공간은 사라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 언론 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2004, 327-328).

경향신문, 서울신문(대한매일) 세 신문이 ‘한·경·서’란 약칭으로 묶이고, ‘조·중·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언론계는 물론 국민사이에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중앙일보 권영빈 주필의 ‘조·중·동’과 한·경·대’란 제목의 칼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상기는 ‘조·중·동’은 이미 ‘일반 명사화’ 되다시피 하였지만, ‘한·경·대(서)’는 편 가름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조·중·동’과 ‘한·경·대(서)’를 편집 이념으로 구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한·경·대’는 ‘빅3’에 뒤쳐진 신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이어가면서, 보수적 언론과 진보성향 언론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때로 신문지면을 통한 보수진보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을 띠는 모습을 보였다. 임동욱(2003)은 한국 신문은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신문의 내용이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진정한 공정보도, 불편부당의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이렇게까지 다른 입장의 보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 신문이나 ‘한·경·대(서)’로 대변되는 진보적 신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용희는 “김대중·노무현의 잇따른 집권으로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이 권력 전면에 나서면서 그동안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보수성향의 기존 엘리트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졌다”면서 “또 일부 유력 언론사들도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 지배엘리트의 일원이라고 해서 언론사로 부터 항상 1차 규정자의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적 유력 종합일간신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진보진영에 대해 공격적 보도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반면, 한겨레와 일부 인터넷 언론은 정반대의 보도태도

를 보이고 있어 언론사간 분열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006, 51).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우리 언론이 보인 태도에 대해 윤영철(2000)은 세이머우어의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라는 개념을 원용해 조선일보는 이념적으로 유사한 한나라당과,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현 서울신문)은 김대중 정부 및 여당과 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조·중·동’과 한겨레신문의 보도 태도를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한 이원섭(2006)은 정부 정책 평가에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각 언론의 지지와 비판이 뒤바뀌었으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는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4개 신문이 자신의 색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⁵⁾

연구자마다 분석대상을 달리해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축으로 묶인 보수적 신문들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가운데, 진보적 색채를 띠는 한겨레신문이나 또는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또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이 남북문제에서 ‘조·중·동’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데는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선행 연구들 중에도 일부 그런 경향이 엿보이지만, 언론계 내부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수적 언론 ‘조·중·동’에 대립되는 진보적 언론으로서의 ‘한·경·서’란 호칭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한·경·서’ 묶음이 비록 독자 수의 차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서는 ‘조·중·동’ 묶음과 비교할 수

5) 이밖에 박선원(2002)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북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수주의(조선, 중앙, 동아)와 자유주의(한겨레, 경향, 대한매일, 한국일보) 언론으로 분류했으며, 김재홍(1999)은 우리나라 일간지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을 ‘비판’, ‘중간 비판’, ‘중간 지지’, ‘지지’의 네 유형으로 나눠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 언론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크게 확장되었음을 밝혔다.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나지만,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언론에 대비돼 진보적 언론으로 분류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 듯하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 태도를 보수 진보 시각에서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경·서’ 묶음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이런 호칭 사용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지 실증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할 터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볼 때,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보수적 언론 ‘조·중·동’ 묶음과 진보적 언론 ‘한·경·서’ 묶음으로 나누는 분류는 타당한 것인가? 이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며, 각 묶음 내의 이념적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III.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1. 분석대상

한국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중 영향력이 크고 남북문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로 대조적 보도 태도를 보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6개 신문을 연구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6개 신문의 남북문제 보도 가운데 각 신문의 주장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사설을 대상으로 했다. 사설은 해당 언론사의 공식 의견이며, 그날그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의제를 선택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독

자의 태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조선일보는 남북문제에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사회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발행부수가 많고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보수 성향 언론의 보도 태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신문과 대비해 한겨레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주 모금으로 창간된 신문으로서, 제도언론 극복을 표방하고 있어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뚜렷이 드러낼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주조합 경영으로 새 출발하며 진보적 색채를 강화했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자본 구성상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해온 터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보수 성향의 '조·중·동' 묶음과 진보 성향으로 인식되는 '한·경·서' 묶음을 대비해 분석할 때 우리 언론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가장 적실하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 연구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첫째,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서, 각 신문의 대북관, 통일관 등이 뚜렷이 드러난 15개 사안을 선정한 뒤,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6개 신문의 사설을 뽑아 내용분석을 통해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둘째, 위 15개 사안 가운데서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더욱 확연히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사안 2개를 별도로 택해 각 신문의 관련 사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분석 단위

내용분석 단위로 삼은 15개 핵심 사안은 남북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언론사 통일담당 논설위원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각 신문이 비중 있게 보도한 정도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15개 사안으로 한정된 까닭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남북문제 보도를 분석한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서 각 정부마다 15개 사안씩 선정했기에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 검색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서비스하는 KINDS를 통해 이뤄졌으며,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KINDS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중앙일보에서 별도로 관련 사설을 수집했다.

분석 시기는 2002년 12월 17일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이 논문의 분석이 최종적으로 끝난 2006년 10월 31일까지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뽑은 6개 신문의 15개 핵심사안 관련 사설 수는 모두 511편이었다.

분석 단위로 삼은 15개 핵심 사안과 관련 사설 편수는 다음과 같다.

- ①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2003년 1월) - 관련 사설 12편
- ② 노무현 대통령 취임, '평화번영정책' 천명 (2003년 2월) - 10편
- ③ 대북송금 의혹과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 (2003년 1월-7월) - 89편
- ④ 노무현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2003년 5월) - 16편
- ⑤ 송두율 교수 입국 및 간첩 혐의 논란 (2003년 9, 10월) - 46편
- ⑥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 결정 (2003년 10월) - 22편
- ⑦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으로 이전 합의 (2004년 1월) - 7편

- ⑧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허위보고 논란 (2004년 7월)
- 36편
- ⑨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2004년 8, 9월) - 30편
- ⑩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2005년 6월)
- 27편
- ⑪ 강정구 교수 '6.25는 통일전쟁' 발언 파문 (2005년 9월) - 14편
- ⑫ 6자회담서 '9.19 선언' 합의 (2005년 9월) - 8편
- ⑬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 (2006년 6월) - 36편
- ⑭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 논란 (2006년 8, 9월) - 93편
- ⑮ 북한 핵 실험 실시 발표 (2006년 10월) - 65편

(2) 분석 유목

15개 핵심 사안을 다룬 사설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립적', '진보적', '매우 진보적' 5개 유목으로 분류했다. 이데올로기는 종종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 형태로 해석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가 각각 담고 있는 속성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단 하나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언론의 보도 태도를 5개의 범주로 분류한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국민들이 통념상 이해하는 보수-진보의 개념이거나 국민의 실질적 이념 분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석 대상 언론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상호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획정한 상대적 거리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 구분을 국가보안법, 통일방안, 한미 공조론 등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⁶⁾

구분	국가보안법	통일 방식	한미 관계	북한에 대한 기본입장	남북 비교
보수	유지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공조 강화	부정적, 불신	남한우월강조
진보	개정 찬성	자주적 통일	비판적 입장	한 민족, 동반자	공존공영

△ 보수적 : 국가보안법 유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남북 통일.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강조.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 표출. 남한 체제의 우월감 표명하며 남쪽 중심으로 사태 파악.

△ 매우 보수적 : 보수적 태도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한 경우.

△ 중립적 : 보수와 진보의 중간적 입장이거나 조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경우, 또는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택하는 경우.

△ 진보적 :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 접근.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 강조. 한미공조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민족적 관점에서의 대북문제 접근. 북한을 적대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동반자적 관계로 파악. 남북 사이에 상호존중과 공존공영 강조.

△ 매우 진보적 : 진보적 태도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한 경우.

측정 방법은 각 신문 사설 내용을 △ 매우 보수적 △ 보수적 △ 중립적 △ 진보적 △ 매우 진보적 등의 5개 범주로 나누어 등간 측정했다. △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된 것에 5점을 주고, △ 보수적 4점, △ 중립적 3점, △ 진보적 2점, △ 매우 진보적으로 평가된 것에

6) 보수-진보 개념 구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통일방안, 한미공조론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손영준(2004)의 분류를 참조한 것임. 이태올로기의 속성과 언론의 이념 담론에 대해서는 강원택(2004)과 정재철(2002)의 논문을 참조할 것.

1점을 주었다. 각 신문은 사안별로 대부분 여러 편의 사실들을 게재했으므로 각 사실별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해당 사안에 대한 신문별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측정했다. 또 각 신문별로 15개 핵심 사안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해 비교함으로써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내용 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핵심 사안 15개를 선정하는 작업은 연구자가 맡되, 각 신문의 관련 사실들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3자인 두 명의 코더의 판단에 따랐다. 코더 간 신뢰도는 0.78(90개 항목 가운데 합치 70, 불합치 20)이었다. 참고로 보수와 매우 보수를 한 묶음으로, 진보와 매우 진보를 한 묶음으로 엮어 보수적, 중립적, 진보적 3가지 유목으로 줄일 경우 코더 간 신뢰도는 0.90(90개 항목 가운데 합치 81, 불합치 9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코더 간에 1차 판정이 다를 경우 토론을 통해 합의한 ‘합의 계수’ 판정표에 따라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다각도로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남북관계 흐름에 영향을 미친 15개 사안 중에서도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더욱 확연히 드러낸다고 판단된 사안 2개를 택해 심층적인 분석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 불거진 대북송금 의혹 특검 도입 논란과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쟁점화 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그것이다. 이 두 사안은 각 신문별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 사실도 각기 89편과 93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를 노무현 정부 1기를 대표하는 사례로, 후자를 2기를 대표하는 사례로 택해 시기별 각 언론의 보도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IV. 내용분석 결과

1. 종합 분석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15개 핵심 사안에 대한 각 신문 사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등간 측정한 결과 < 표 1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노무현 정부 시기 신문별 이데올로기 성향 평가표

		조선 일보	중앙 일보	동아 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 신문	서울 신문
1기 (2002년 12월 17일 ~ 2004년 7월 31일)	북한, NPT 탈퇴 선언	5	5	5	2	2	4
	노무현 대통령 대북정책 천명	4	4	4	1	3	3
	대북송금 의혹 특검도입 논란	5	5	5	2	4	3
	노-부시 첫 한미정상 회담	5	4	4	1	3	3
	송두율 교수 입국 논란	5	4	5	2	3	3
	이라크 파병 논란	4	3	4	1	2	3
	미군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5	4	4	1	3	3
	북한선박 NLL 월선 허위보고	4	3	4	2	4	3
	1기 평균	4.63	4.00	4.38	1.50	3.00	3.13

2기 (2004년 8월 1일 ~ 2006년 10월 31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5	4	4	1	2	3
	정동영 통일장관, 김정일위원장 면담	4	4	4	1	3	3
	강정구 교수 발언 파문	5	4	4	1	2	3
	6자회담 '9.19 선언'	5	3	3	1	2	2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	5	5	5	2	2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5	4	5	1	2	2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5	5	5	2	3	3
2기 평균		4.86	4.14	4.29	1.29	2.29	2.57
전 체 평 균		4.73	4.07	4.33	1.40	2.67	2.87

성향평가 / 매우 보수적(5점), 보수적(4점), 중립적(3점), 진보적(2점), 매우 진보적(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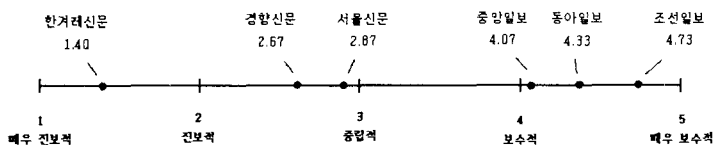
각 신문별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종합 평가한 결과 조선일보 4.73점 (합계 71점), 중앙일보 4.07점 (합계 61점), 동아일보 4.33점 (합계 65점), 한겨레신문 1.40점 (합계 21점), 경향신문 2.67점 (합계 40점), 서울신문 2.87점 (합계 43점)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일보가 가장 보수적이고, 다음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서였으며, 한겨레신문이 가장 진보적이고 경향신문이 약간 진보적이며 서울신문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일 경우의 점수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매우 보수적 쪽에 치우쳐 있고, 동아일보가 매우 보수와 보수의 중간 지점에, 중앙일보가 보수 쪽에 위치한 반면, 한겨레신문은 매우 진보적 쪽에 치우치고, 경향

신문은 진보와 중립 사이, 서울신문은 중립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엄밀히 살펴보면, 진보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된 언론 중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오히려 중립 쪽에 더 가까운 편이다. 다시 말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매우 보수나 보수로 입장이 일관되고 확고한 데 비해 ‘한·경·서’는 ‘조·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 쪽이라곤 하지만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진보 성향이 얇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1 참조).

이는 각 신문별 이데올로기적 거리를 측정한 결과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조·중·동’ 묶음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된 조선일보(4.73점)와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으로 평가된 중앙일보(4.07점)의 거리는 0.66점에 불과하다. 즉 세 신문이 0.66점의 범위 안에 모두 포함돼 있어 이데올로기적 결속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경·서’ 묶음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된 한겨레신문과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으로 평가된 서울신문의 거리는 1.47점이나 돼 세 신문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친밀도가 매우 느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경·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으로 평가된 서울신문과 ‘조·중·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으로 평가된 중앙일보의 이념적 거리는 1.20점에 불과해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47점보다 오히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노무현 정부 시기 신문별 이데올로기적 성향



이런 이데올로기적 지형은 노무현 정부 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눠

서 분석할 때 더욱 뚜렷이 특징이 드러난다. 분석단위로 삼은 15개 핵심 사안에 대한 각 언론 보도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평가한 표를 정밀 분석하면 일정 시점을 분기점으로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보도 태도가 점차 진보적으로 바뀌며, 한겨레신문 보도 태도와 지속적으로 가까워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분석단위로 삼은 사안 중 8번째인 북한 선박 NLL 월선 허위보고 논란(2004년 7월)과 9번째인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2004년 8, 9월) 사이가 바로 그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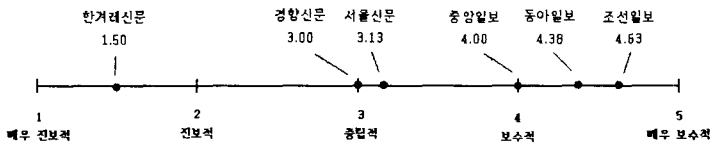
시기상으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국민적 역풍을 맞아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여대야소의 힘 있는 여당으로 변신해 첫발을 내딛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여는 정치적 격변기와 맞물린다. 국민의 지지에 고무된 정부·여당은 내심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 의지를 드러내기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8월 26일)를 기점으로 시작된 국가보안법 논쟁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합헌 결정,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반박성 판결,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기 방침 발표, 보수단체들의 항의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다. 노무현 정부가 총선 승리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정치적 배경과 경향신문·서울신문의 보도 태도 변화가 직접적 연관을 맺는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이때를 분기점으로 두 신문의 보도 태도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분석한 표에서 입증된다. 이에 따라 앞 시기(1-8번)를 1기로 정하고, 뒤 시기(9-15번)를 2기로 정해 각 신문 보도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흐름을 각기 따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1기 평균을 보면, 조선일보가 4.63점(소계 37점), 중앙일보 4.00점(소계 32점), 동아일보 4.38점(소계 35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중·동' 세 신문 사이의 이념적 거리는 0.63점으로 이데올로

기적 결속도가 매우 높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1기 평균 1.50점(소계 12점)이었으나, 경향신문은 3.00점(소계 24점), 서울신문은 3.13점(소계 25점)으로 나타나 ‘한·경·서’ 세 신문 사이의 이념적 거리는 1.63점으로 크게 벌어져 이데올로기적 친밀도가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특히 이 시기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의 거리는 0.87점에 불과해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63점보다 훨씬 가깝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거리 역시 1.00점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50점보다 한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신문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된 조선일보의 거리가 1.50점으로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63점보다 가까운 결과를 보였고,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거리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가 1.50으로 똑같은 결과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가 총선 승리를 통해 정부에 이어 의회를 완전 장악하기 전 시기인 1기에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한겨레신문과 함께 진보적 언론으로 한데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이념적 친밀도가 매우 느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조·중·동’ 묶음과의 이데올로기적 친밀도가 한겨레신문과의 친밀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 뒷부분에서 상세히 다룰 대북송금 의혹 특검도입을 둘러싼 각 언론의 보도 태도 심층 분석 사례는 이런 정황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게 될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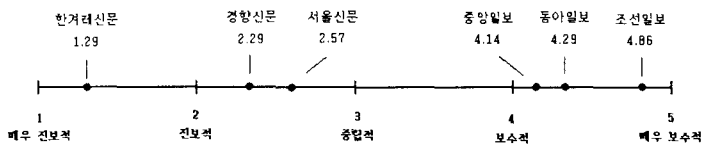
〈그림 2〉 노무현 정부 1기 신문별 이데올로기적 성향



그러나 노무현 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경향은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보도태도가 점차 진보적 색채를 띠어가면서 한겨레신문과의 이데올로기적 친밀도를 더해가고, 보수적 태도를 고수하는 '조·중·동'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기 평균 점수를 보면 조선일보가 4.86점(소계 34점), 중앙일보 4.14점(소계 29점), 동아일보 4.29점(소계 30점)으로 여전히 보수적 태도를 굳게 지키고 있다. '조·중·동' 사이의 이념적 거리는 0.72점으로 여전히 밀집해 있어 이데올로기적 결속도가 매우 높다.

한겨레신문은 1.29점(소계 9점)으로 여전히 진보적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2.29점(소계 16점), 서울신문은 2.57점(소계 18점)으로 나타나 두 신문이 1기 때보다 한결 진보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준다(그림 3 참조). '한·경·서' 사이의 이념적 거리도 1.28점으로 '조·중·동' 사이의 거리 0.72점보다는 넓게 포진해 있지만, 1기에서의 거리 1.63점에 비하면 한결 좁아지고 친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사이의 거리도 1.57점으로 벌어져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28점보다 멀어졌다. 노무현 정부 2기 때의 대표적 논쟁 사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각 신문의 보도 태도 심층 분석 사례는 이처럼 달라진 양상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다.

〈그림 3〉 노무현 정부 2기 신문별 이데올로기적 성향



한편 각 신문별로 노무현 정부 1기와 2기에서의 보도 태도를 비

교 분석해 일관성 여부를 살펴보면, 이른바 ‘조·중·동’과 한겨레신문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1기 평균 4.63점, 2기 평균 4.86점으로 일관되게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굳게 지켰다. 중앙일보 역시 1기 평균 4.00점, 2기 평균 4.14점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 동아일보도 1기 평균 4.38점, 2기 평균 4.29점으로 보수적 태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적 색채를 줄곧 유지한 한겨레신문은 1기 평균 1.50점, 2기 평균 1.29점으로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경향신문은 1기 평균 3.00점에서 2기 평균 2.29점으로 무려 0.71점이나 낮아졌고, 서울신문은 1기 평균 3.13점에서 2기 평균 2.57점으로 0.56점의 차이를 드러냈다.

각 신문의 보도 태도의 일관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평균 점수와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사안을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사안이 한 건도 없었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이 각각 1건, 경향신문이 2건이었으며 중앙일보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일보의 경우 평균 점수 4.07점이었는데, 이라크 전투병 파병 논란과 북한선박 NLL 월선 허위보고, 6자회담 ‘9.19 선언’에 대해 3점(중립적)으로 평가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3건 모두 실질적 편차는 1.07점에 불과해 일관성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일보는 4점(보수적) 평가가 가장 많았는데, 북한 NPT 탈퇴 선언,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등 직접적인 무력 위협에 대해서는 5점(매우 보수적)으로 나타나 강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의 경우 대북송금 특검도입 논란과 북한선박 NLL 월선 허위보고 사안에서 4점(보수적)으로 평가돼 평균 점수 2.67점보다 높게 나왔다. 동아일보는 6자회담 ‘9.19 선언’에서 3점(중립적)으로 평가돼 평균 점수 4.33점보다 낮은 점수가 나

왔다. 서울신문은 북한 NPT 탈퇴선언에 4점(보수적)으로 평가돼 평균(2.87점)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15개 사안 중 5점 11건, 4점 4건으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한겨레신문은 1점 9건, 2점 6건으로 진보적 태도를 줄곧 견지했다.

노무현 정부 1기와 2기를 종합해 보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보수적 입장이 일관되게 확고하고 한겨레신문은 진보적 색채가 분명한 데 비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조·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 쪽에 위치해 있지만 진보적 성향이 얇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노무현 정부 2기로 들어서면서 1기 때 이념적으로 모호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진보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몇몇 사안에서는 '조·중·동'에 대립되는 '한·경·서'로 묶어도 될 정도로 한겨레신문과의 이념적 친밀도를 드러냈다.

2. 심층분석 사례

(1) 노무현 정부 1기 - 대북송금 의혹 특검 도입 논란을 중심으로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각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1기 때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사안 보도 양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신문은 가장 진보적 태도를 보인 한겨레신문과 어느 정도 보조를 같이했으나, 때로 방향을 정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향신문은 대체로 '조·중·동'과 같은 대열에 서 있다가 때로 한겨레신문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등 줄곧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안 자체가 물러가는 정권에서 한 일을 대체하는 권력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털어내려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서 더욱 민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몇 단계를 거치며 확산됐다. 첫째 단계는 현대상선의 4000억 원 대북 비밀지원 의혹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 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논란이 본격화했다. 둘째 단계는 당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이 여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된 시기다. 셋째 단계는 특검이 구성되고 70일간의 조사를 거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이다.

가) 1단계 - 대북송금 의혹 확산

대북송금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각 언론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 두루 견해를 같이 했다.

조선일보는 “남북관계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북측의 남한에 대한 오판과 뒤틀린 전략은 완전히 고질화될 것”이라며 “돈을 보낸 목적이 집권 측 주장처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당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용하고, 노벨상을 타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도 가려야 한다”(2003년2월5일)고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고도의 정치적 사건인 만큼 독립된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정확한 진상 규명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동아일보는 “남북 간의 대화와 사업이 ‘음습한 거래’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한다”(1월31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은 “대북송금 의혹을 정치적으

로 풀어가자는 해법이 사회의 광범한 공감을 얻으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2월3일)고 ‘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견해 표명을 미루며 여론 흐름을 살피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2월6일)고 완곡하게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남북 정협 의 명분과 당위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1월31일)고 진상 규명 쪽에 무게를 실었다.

진상공개 여론에 몰린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열흘 전 대북송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각 신문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 목소리로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고, 사과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며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경향신문도 ‘조·중·동’과 같은 논리를 폈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은 김 대통령과 현대 측의 해명이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2월18일)고 무게 중심을 달리했다.

나) 2단계 -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 논란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문제가 크므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내용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정국의 안정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조선일보는 “특검법 통과는 법 절차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며 “지난 14년간 거부권은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3월1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비리를 덮고 가자는 주장에 노 대통령이 동조할 경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3월3일)이라고 압박했다. 동아일보는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이 유감스럽기는 해도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3월3일)고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경향신문은 “만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2월28일)며 거부권 행사 반대 대열에 섰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대화와 양보로 문제를 풀려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한나라당이 외면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3월1일)고 촉구했다. 서울신문도 “대통령이 먼저 여야의 동의를 기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재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3월3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제한적으로 하자’는 여야간 재협상 약속을 전제로 원안대로 공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당연하고도 현명한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되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엄정하면서도 절제된 특검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3월15일)고 덧붙여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신문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상황을 피한 것이 다행스럽다”(3월15일)고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혹시라도 한나라당이 특검법이 공포됐으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후속 협상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배부른 흥정’으로 상황을 꼬이게 만든다면 정치적 배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3월15일)이라고 한나라당의 위약을 경계하고 나섰다.

다) 3단계 - 특검 연장 논란 및 특검 발표 평가

대북송금 특검이 70일간의 1차 수사를 마친 뒤, 각 신문은 연장 필요와 불가로 첨예하게 맞섰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추가로 30

일간 수사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겨레·서울신문은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경향은 연장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조선일보는 “5억 달러가 정상회담의 대가였는지, 누가 대북송금을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등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6월16일)고 강조했으며, 동아일보는 “만약 타의나 외압 때문에 특검수사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끝난다면 새로운 대립과 분열의 씨앗을 키울 게 뻔하지 않은가”(6월16일)고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수사는 가급적 기한 내 매듭지어야 하나 부득이한 시한 연장은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월17일)고 모호하지만 연장 반대로 해석되는 태도를 보였으나, 며칠 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상황이 바뀌었다”며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면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6월20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은 “남북 관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곤란하다”(6월16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두환 특검팀이 발표한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북한정권에 몰래 갖다 바쳤으며,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은행에 압력을 넣고 국정원은 송금을 도왔으며, 현대는 갖가지 허위장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줄거리다”(6월26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돈을 몰래 주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그 명분이 무엇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치욕이다”(6월26일)고 비판했으며, 동아일보도 “대북 송금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남북관계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6월26일)고 특검 수사를 두둔했다.

경향신문은 “대북송금은 절차상의 위법문제로 보느냐, 고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 두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이 현실적이고 또한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6월26일)이라고 대북송금을 변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종래의 비판 입장과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한겨레신문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줄이고 평화를 증진할 가장 좋은 돌파구가 정상회담 개최라고 확신했다면, 국익 차원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용도로 쓰인 돈은 ‘범죄’가 아니라 ‘평화유지비용’으로 봐야한다”(6월26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비정상적인 ‘뒷거래’가 있었다 해서 정상회담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국익에도 어긋나고, 자칫 자기비하만 될 수도 있다”(6월26일)고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각시켰다(표 2 참조).

(표 2) 대북송금 특검 논란 단계별 각 신문의 보도 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1 단계	김 대통령 해명 후	변명뿐. 특검 필요	무성의. 특검 필요	진실결여. 특검 필요	미흡. 특검 미언급	발뺌. 특검 필요	고심해법 특검 미언급
2 단계	한나라당 단독처리	문제없음	문제없음	문제없음	단독처리 부당	문제없음	단독처리 부당
	노대통령 거부권 포기결정	찬성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3 단계	특검 연장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반대
	특검수사 발표평가	긍정	긍정	긍정	다각도로 볼 필요	다각도로 볼 필요	다각도로 볼 필요

(2) 노무현 정부 2기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가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은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 갈등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이 사안 보도태도는 노무현 정부 2기 들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보도태도가 점차 진보적 색채를 띠어가면서 ‘조·중·동’에 대립해 ‘한·경·서’ 묶음으로서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은 2006년 7월 열린 9차 ‘한미동맹 안보정책 구상(SPI)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부터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조선일보 7월 19일자 특종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한국이 제시한 시한인 2012년보다 빠른 2010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길 뜻을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측이 서둘러 작통권을 되돌려 주려는 데엔 최근 불편한 한미관계 때문에 한국 측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기점으로 찬반 여론이 갈리고, 보수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극심한 ‘남남갈등’ 양상으로 변졌다.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조·중·동’의 시기상조론과 ‘한·경·서’의 찬성 논조로 처음부터 확연히 갈렸다. 조선일보는 7월20일 사설에서 “우리 정부는 2012년을 시한으로 정해 작전권 환수를 추진해 왔는데 미국은 그보다 2년 앞당겨 작전권을 되찾아가라고 했다”며 “미국은 작전권문제가 이 정권의 ‘반미 장사’에 이용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작전권을 갖고 싶으면 빨리 찾아가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력 확보 대책은 그야말로 막연하기 짝이 없다”(7월25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조·중·동’은 전직 국방장관 13명이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간담

회에서 작전권을 환수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일제히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다. 또 윤 국방장관이 “오래 전에 장관을 한 분들이라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작전권 환수를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 이때를 전후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8월9일 사설에서 노무현 정부가 “작전권 단독 행사에다 ‘작전권 환수’라는 분칠을 하고, 그걸 되찾아 자주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 선전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겨레신문은 “전시 작전권 환수는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부터 현안이 돼 왔다”며 “두 나라가 합의해서 긴 시간에 걸쳐 진행시켜 온 이런 협의를 중단 하라는 건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8월4일)고 환수 논의 중단 요구를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보수 세력을 겨냥해 “이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 한미동맹 균열 = 주한미군 철수’ 논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보수진영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8월10일)고 비난했다. 서울신문은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처럼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겨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8월4일)고 주장했다.

‘조·중·동’의 환수 반대 목소리는 9월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 분위기를 이끌어갔는데, 7월20일부터 9월13일까지 신문을 48회 발행하면서 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 사설을 무려 31편이나 실었으며, 이 중에는 평소 분량보다 훨씬 긴 사설들이 많았다. 그러나 환수 반대 목소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사임을 직접 밝히고, 이 문제가 정치

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경계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경·서’는 보수진영의 반대논리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은 “국내 일부 보수세력도 이제 작통권 환수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순조로운 환수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구축에 기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9월16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책임이 있고, 전시 작통권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9월16일)고 강조했고, 서울신문도 부시 대통령의 정치 문제화 반대 발언은 “한국 내 보수진영의 반대 여론을 겨냥한 것”(9월16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환수 반대 목소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다시 고개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이 상황에서도 전작권 단독행사를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인가”(10월10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10월11일)며 전작권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북의 핵 보유로 대북 억지력이 흔들리게 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10월10일)고 주장했다. 북한 핵 실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 서울신문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기정사실화하는 토대에서 “한국이 원하는 시점에 작통권을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미국측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0월23일)고 주장했다< 표 3 참조 >.

〈 표 3 〉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 각 신문의 보도 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전작권 환수인가 단독행사인가	단독행사	단독행사	단독행사	환수	환수	환수
미국 정부가 동의한 이유	노무현 정부에 분노	노무현 정부에 분노	노무현 정부에 분노	미군 재배치 계획 및 전략적 유연성 추구	미군 재배치 계획 및 전략적 유연성 추구	미군 재배치 계획 및 전략적 유연성 추구
국방비 증가	대폭 증가	대폭 증가	대폭 증가	환수와 무관	환수와 무관	환수와 무관
안보 불안	안보우려 시기상조	안보우려 시기상조	안보우려 시기상조	준비하면 걱정없음	준비하면 걱정없음	준비하면 걱정없음

V. 결론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의 사설 내용을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내용 분석해 신문 방송 등 언론계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흔히 일컫는 이른바 ‘조·중·동’ 묶음과 ‘한·경·서’ 묶음 분류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것이다.

우리 언론을 이른바 ‘조·중·동’ 묶음과 ‘한·경·서’ 묶음으로 나누는 분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진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노무현-친노무현’의 의미도 어느 정도 가미돼 혼용된 느낌이다. 이 두 개념은 대체로 중첩되지만 때로 엇갈리기도 한다. 이

논문 심층 분석 사례에서 살펴본 대북송금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포기 결정에 대해 ‘반노무현’ 성향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이 찬성 뜻을 밝힌 반면, ‘친노무현’으로 여겨지는 한겨레신문이 내심 반대 뜻이 포함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은 두 개념이 엇갈린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정한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일 경우 ‘반노무현’ 성향이 겹쳐 나타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이면 ‘친노무현’ 성향과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 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정부와의 친밀도 여부를 둘러싼 해석은 빼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진보 개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각 신문의 지면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 사설 내용만 분석했다. 사설이 신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기는 하지만, 신문은 사설 이외에 뉴스 보도나 해설, 칼럼 등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그 성격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사설만의 분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것이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의 소유 구조, 소유자의 이념적 성향, 소유자의 언론사에 대한 통제권 행사 정도 등 신문 외적 측면에 대한 분석 없이 신문 지면만 놓고 분석한 것도 한계로 작용할 것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의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6개 신문의 남북문제 보도 태도를 분석한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분석 대상 신문들이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보도 태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연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시한 연구방법에 따라 각 신문별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종합 평가한 결과 조선일보 4.73점, 중앙일보 4.07점, 동아일보 4.33점, 한겨레신문 1.40점, 경향신문 2.67점, 서울신문 2.87점으로, 조선일보

가 가장 보수적이고, 다음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서였으며, 한겨레신문이 가장 진보적이고 경향신문이 약간 진보적이며 서울신문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일 경우의 점수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매우 보수적 쪽에 치우쳐 있고, 동아일보가 매우 보수와 보수의 중간 지점에, 중앙일보가 보수 쪽에 위치한 반면, 한겨레신문은 매우 진보적 쪽에 치우치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중립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조·중·동’ 묶음 사이의 이념적 거리는 0.66점에 불과해 이데올로기적 결속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한·경·서’ 묶음 사이의 거리는 1.47점이나 돼 이데올로기적 친밀도가 매우 느슨함을 보여주었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의 거리는 1.20점에 불과해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47점보다 오히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서’ 묶음은 평소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다가도 정치적·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서울신문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뚜렷했다. 다시 말해 ‘한·경·서’는 ‘조·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곤 하지만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진보 성향이 얇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지형은 노무현 정부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눠서 분석할 때 특징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1기 평균을 보면, 조선일보가 4.63점, 중앙일보 4.00점, 동아일보 4.38점으로 ‘조·중·동’ 세 신문 사이의 이념적 거리는 0.63점인 반면, 한겨레신문은 1.50점, 경향신문 3.00점, 서울신문 3.13점으로 ‘한·경·서’ 세 신문 사이의 이념적 거리는 1.63점으로 크게 벌어져 있어 이데올로기적 친밀도가 매우 느슨했다. 특히 이 시기에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의 거리는 0.87점에 불과해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63점보다 훨씬 가깝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거리 역시 1.00점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50점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

신문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된 조선일보의 거리가 1.50점으로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 1.63점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거리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거리가 1.50점으로 똑같은 결과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가 총선 승리를 통해 정부에 이어 의회를 완전 장악하기 전 시기인 1기에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한겨레신문과 더불어 진보적 언론 범주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이념적 친밀도가 매우 느슨했다. 노무현 정부 1기 때 발생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 도입 논란 심층 분석 사례는 이런 경향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경향은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보도태도가 점차 진보적 색채를 띠어가면서 한겨레신문과의 이데올로기적 친밀도를 더해가고, 보수적 태도를 고수한 '조·중·동'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기 평균 점수를 보면 조선일보가 4.86점, 중앙일보 4.14점, 동아일보 4.29점으로 '조·중·동' 사이의 이념적 거리는 0.72점으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결속도가 매우 높다. 한겨레신문은 1.29점으로 여전히 진보적 태도를 고수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2.29점, 서울신문은 2.57점으로 점수가 낮아져 두 신문이 1기 때보다 진보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준다. '한·경·서' 사이의 이념적 거리도 1.28점으로 '조·중·동' 사이의 거리 0.72점보다는 넓게 포진해 있지만, 1기에 서의 거리 1.63점에 비하면 한결 가까워지고 친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양상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보수 쪽에 몰려 있던 우리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이 다소나마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우리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갈등 구조를 더욱 노출시켰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 2기 때의 대표적 논쟁 사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각 신문의 보

도 태도 심층 분석 사례는 이처럼 달라진 양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조·중·동’ 묶음 평가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비해 보수 색채가 훨씬 엷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가 노무현 정부에서 한때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정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한 점, 그리고 중앙일보가 유명 진보 인사들의 칼럼을 자주 실어 독자들 사이에 진보적 이미지도 ‘성공적으로’ 가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사설 내용 분석 결과는 보수적 틀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서’ 묶음 평가에서는 한겨레신문이 진보적 쪽에 치우친 반면, 진보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오히려 중립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흔히 일컬듯 보수적 언론 ‘조·중·동’ 묶음에 대칭시켜 진보적 언론 ‘한·경·서’ 묶음으로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보수 쪽에 치우친 ‘조·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 쪽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겨레신문과 한데 묶어 진보적 언론인 ‘한·경·서’로 통칭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한·경·서’ 묶음은 ‘조·중·동’ 묶음에 대비되면서 의미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따라서 ‘한·경·서’ 묶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소유 구조 문제에서 국민주 모금이나 사원조합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앞으로 당분간 진보적 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신문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보도 태도가 바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한·경·서’ 묶음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 언

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진보 틀로 구분하려면, 진보적 언론 범주에 신문 외에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인터넷매체를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을 한결 적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04. “한국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348.
- 강원택. 2004.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5-100.
- 권영빈. 2002. “‘조중동’과 ‘한경대’.” 『중앙일보』 2002(4월12일).
- 김재홍. 2003.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논조와 국민여론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7권 2호, 197-218.
- 남재일. 2006.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재관행에 나타난 정권-언론 관계 변화: 청와대 출입 기자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95-124.
- 박선원. 2002.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반응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121-154.
- 박정순. 2000. “뉴스의 객관성과 이념성: 남북화해시대 남북 언론의 대립과 변화.” 『언론과 사회』 29호, 6-42.
- 손영준. 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40-266.
- 송용희. 2006. “한국 유력 일간지와 정치적 행위자 간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4권 1호, 43-78.
-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호, 48-81.
- 이상기. 2002. “‘조·중·동’과 ‘한·경·대’ 편집이념으로 구분짓는 것은 잘못.” 『저널리즘비평』 33호. 한국언론학회. 68-71
- 이원섭. 2006.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 분석.” 『한국언

- 론정보학보』 35호, 329-361.
- 이준웅. 2004. “언론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28-56.
- 임동욱. 2003. “정치보도의 당파성: 가식적 공정성보다 솔직한 당파성 필요.” 『신문과 방송』 393호.
- 정재철. 2002. “한국언론과 이념담론.”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314-348.
- 한동섭 · 임종수. 2002. “미디어 정보원 진술 활용과 현실정의.”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20-556.
-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 Roberts, B.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New York: Holmes & Meier.
-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 The media and Vietna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x, K., & Engels, F. 1970.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Shoemaker, P. & Reese, S. 1996. *Mediating the Message :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 Longman, 김원용 역 (1996),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 나남.

ABSTRACT

The Analysis of Report Attitude of Korean Media on South-North Korea Issue, Und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Study on the Editorials of the Chosun - Joong Ang - Dong A Ilbo and Hankyoreh - Kyunghyang - Seoul Shinmun

LEE Won-sup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Kyungwon University

This study's aim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ideological tendencies in Korean newspapers,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especially on South-North Korea relations. To do so, six of well-known Korean newspapers were studied; these are of Chosun Ilbo, Joong Ang Ilbo, Dong A Ilbo - 'the conservative' newspapers - and Hankyoreh Shinmun, Kyunghyang Shinmun, Seoul Shinmun, representing 'the progressive' newspapers.

Chosun Ilbo has, this study points out, the most conservative tones; Dong A Ilbo and Joong Ang Ilbo come next. Hankyoreh Shinmun is with most progressive color; Kyunghyang Shinmun and Seoul Shinmun follow. The Chosun - Joong Ang - Dong A Ilbo show strong ties in ideological tendencies and their tones are comparably consistent with each other, whereas Hankyoreh - Kyunghyang - Seoul Shinmun do not always share the same views, especially regarding rather sensitive issues. In fact, the ideological ties between Hankyoreh - Kyunghyang - Seoul Shinmun are relatively weak; Hankyoreh Shinmun shows very progressive attitudes while Kyunghyang Shinmun, and Seoul Shinmun take rather moderate

tones.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may be unreasonable to make out the 'Chosun - Joong Ang - Dong A Ilbo Versus Hankyoreh - Kyunghyang - Seoul Shinmun' classification in the first place.

Key Words: reporting South-North Korea Issue, ideology,
conservative, progressive, Roh Moo-hyun
Administration